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노사 평행선… 표결 놓고도 갈등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합의 불발
사용자, 편의점 등 구분적용 제안
근로자, 노동자 삶 더 피폐해 질 것
공익위원 '표결' 제안도 반대입장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소비자물가 2.4% 상승… 11개월 만에 최저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
가공식품 인상 지연 등 둔화 기여
'유가 상승세' 물가불안 불씨 남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 폭을 보였다. 가공식품 가격인상 지연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할당관세 적용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제철과일 출하를 비롯해 전기·수도·가스 요금 동결 등도 상승폭 둔화에 기여했다. 단, 휘발유·경유 등의 유가는 언제든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다. 석유류 가격은 6월 들어 1년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인 4.3%를 기록하는 등 최근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월(3.1%)과 3월(3.1%) 3%대에서 4월(2.9%)과 5월(2.7%)에 2%대로 내려온 바 있다. 이후 6월 들어 2.5% 선마저 밑돈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상승폭은 확대됐는데 그 외 농산물,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수도·가스는 요금 동결로 기저효과가 발생해, 2021년 9월 0.1% 이후 33개월 만에 최저 상승"이라고 말했다.

과일 값은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해 오름 폭이 컸다. 하지만 전월대비로는, 제철과일이 출하되면서 오름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심의관은 "날씨가 좋아 채소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제철과일 대부분이 전월대비 하락했다"며 "(특히) 참외·수박 등의 가격이 전월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도시가스(0.5%)와 지역난방비(7.3%), 상수도료(3.4%)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또 라면(-5.0%)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1.2%에 머물렀다. 가공식품 물가 오름 폭은 2021년 2월 이래 4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문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다.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함에 따라 국내 석유류도 올해 3월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 이후 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달 4.3% 오르며 2022년 12월(6.3%)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손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뉴시스

尹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후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조사처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를 선택한 것은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만일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은 최장 180일까지 직무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김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임도 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는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의를 표했다. 야당이 주도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1년 새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자진사퇴가 반복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마포자이, 평당 5150만원… 전용 84㎡ 17.4억

›› 1면 '집 사자, 6만명 몰린…'서 계속

신혼부부가 79가구 모집에 3980명 접수로 50대 1, 다자녀가구가 43가구 모집에 1049명이 신청해 24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5150만원으로 강북에서는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 16억4000만~17억4000만원 선이다. 당초 강북 최고 분양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시장에서 무난하게 소화되면서 강북도 평당(3.3㎡) 분양가 5000만원 시대가 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특별공급은 조건이 생애 한 번만 쓸 수 있거나 한정적이어서 몇 만명이 몰리거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통 본 청약에 앞서 특별공급 경쟁률로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대부분 크게 흥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산성동에 지어지는 산성역 헤리스톤 특별공급도 604가구 모집에 7118명이 신청해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가 33세대 모집에 1688명, 생애최초가 16세대 모집에 4856명이 신청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9억원 안팎, 전용 84㎡가 11억원 안팎이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들어서는 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507세대인 특별공급 청약에 1959명이 신청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전용 84㎡의 분양가가 7억원 안팎에서 공급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